

‘지역사람 우대?’… 공정위, 지자체 조례·규칙 196건 손본다

지자체와 협업 올 연말까지 개선
소비자 이익 저해, 진입제한 등 과제
행안부 합동평가에 실적 포함 계획

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위촉시 관
내 개업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거나
관급 자재 구매나 용역에서 지역 건설
업체를 우대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
전망이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의 경쟁제
한 및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는 조례·규
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, 관련 지자
체와 협업해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
했다고 2일 밝혔다.

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위원회 자체 발
굴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. 상
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, 지자체별
로 동일·유사한 자치법규가 많다. 규제
유형별로, 소비자 이익 저해가 80건

〈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수〉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공정위
대상건수	20	13	8	9	6	6	6	2	24	
시·도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	
대상건수	15	10	13	12	17	18	15	2	196	

(40.8%)으로 가장 많고, 사업자 차별 67
건(34.2%), 진입제한 40건(20.4%), 사
업활동 제한 9건(4.6%) 등이며, 지역별
로 경기 24건, 서울 20건, 부산 13건, 강
원 15건, 전남 17건, 경북 18건 등 17개
광역지자체 모두 포함된다.

개선과제 세부 내역을 보면, 지자체
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관내 소재
회계사로 제한하거나, 지자체 법률고문
이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관내 소
재 변호사로 제한하는 내용에서 지역제

한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.

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, 간행물,
전통주,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
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
용하도록 하는 조례·규칙에서는 우선
구매·사용·공급 등의 규제를 없애기로
했다. 한 지자체 ‘지역전통주산업 육성
지원에 관한 조례’를 보면, 도지사는 전
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
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
도록 노력해야 하며, 시·군에서 개최하는

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
하도록 해당 시장·군소에게 권장할 수
있도록 하고 있다.

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제한 규제가
특정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
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, 어렵게 해 시
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
했다.

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
영업방침이나 범위, 거래상대방 또는
거래 조건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통제하
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개선과제에 포
함됐다.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
입점 사업자에게 전대(재임대) 행위를
금지하는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. 공정
위는 해당 규제가 사업자가 자유롭게
결정해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, 거
래상대방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직·간접
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
소시킨다고 봤다.

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
례로는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
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
우에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조례가
꼽힌다. 한 지자체 운영 캠핑장 관리 및
운영 조례를 보면, 예약 취소에 따른 이
용료 환불 규정은 있으나, 운영자 귀책에
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. 또 지자
체 운영 체육시설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
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·정지된 경우
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.

공정위는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
에 준해 배상토록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
다.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·규칙 개
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
부가 실시하는 ‘지자체 합동평가 지표’
에 이같은 조례·규칙 개선 실적을 포함
하도록 할 계획이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metroseoul.co.kr

경영악화 소상공인 채무상환 최대 4년 연장

소진공, ‘집중관리기업 제도’ 지원
업체 월 상환 부담금액 최대 65%↓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고물
가,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
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
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‘집중관리기
업 제도’를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접
수·지원한다.

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집중관리기업
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
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제조정을 통해 최
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.

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월
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%까지 줄여주
는 효과를 가진 ‘다중채무 1계좌 통합
상환 플랜’을 제공받는다.

マイ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
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

〈집중관리기업제도 지원내용〉

구분	세부사항	소진공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업력 3년 이상 공단대출 원금잔액 합산 3천만원 이상보유 ▶ 시설자금 거치기간 중인 채무자의 경우, 원리금 상환기일 3개월 전 限 (운전자금 통합계좌 채무제조정의 경우 거치기간 잔여회차 무관) 	
신청·접수 시기	▶ 매월 1~9일	
방법	▶ 다중 대출계좌 통합운용을 통한 월 상환 부담 완화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대 4년 ▶ 제한사항 	
기간	▶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, 취소결정시 이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	

회·출여할 수도 있다. 신청에서 심사까
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
개월 이내로 단축됐다.

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달 1일에서
9일까지 소진공 77곳 지역 센터와 상
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
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
을 방문해 신청서류 심사 등을 진행한
다.

박성효 이사장은 “집중관리기업 제

도는 ‘3고 위기’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
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
기 위해 마련됐다”면서 “위기를 극복하
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
관심과 신청을 바란다”고 전했다.

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
상환 기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
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. 향후 6개월
간 채무제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
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.

/김승호 기자

한전, 친환경·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지원

기술사업화 주관기관 선정

한국전력은 중기부가 공고한 ‘초격
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’ 혁신분야
창업파키지 사업의 친환경·에너지 분야
기술사업화 담당 주관기관으로 선정됐
다고 2일 밝혔다.

‘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’
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
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해 글로벌
진출이 가능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
선별, 창업자금과 R&D, 초격차 전용
펀드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.

초격차 10대 분야는 ▲시스템반도체
▲바이오·헬스 ▲미래 모빌리티 ▲친환
경·에너지 ▲로봇 ▲빅데이터·AI ▲사
이비보안·네트워크 ▲우주항공·해양
▲차세대원전 ▲양자기술 등이다.

정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중 올해 전



/한국전력

환경·에너지 분야 등 5대 분야의 스타
트업 270개사를 선별해 민관 합동으로
향후 3년간 3440억원의 투자, 사업화
및 기술개발(R&D) 자금을 지원할 예
정이다.

선발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
의 사업화 자금과 5억원의 R&D 연계
지원을 받는다.

/허정윤 기자 zelkova@

‘농촌 빙집 개량’ 1주택자도 금융 지원

최대 2억원까지, 2% 금리 대출

정부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1주택
자도 신청할 수 있고, 최대 2억원까지
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주
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빙집 개량에
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
상 규제를 개선하고, 사업 신청자를 지
자체에서 연중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.

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 주
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
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
자 지원하는 사업이다. 건축법상 건축
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이나 신
축 시 융자가 가능하다. 개량 융자 한도는
최대 1억원,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
억원으로 대출금리는 2%가 적용되고
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. 변동금리 선
택도 가능하며, 주택의 연면적(부속건
물 포함)은 150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.

다만,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
에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 규정이

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
으나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
한 상담이 필요하다. 이외에도 이 사업
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·신축할 경우
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,
지적측량수수료를 30%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.

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
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
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지
방의 저가 주택일 경우 농촌 빙집을 ‘세
컨 하우스’로 마련해도 종부세나 양도
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을 것으로
보인다.

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
“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
스에 관심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
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
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
다”며 “농촌지역도 빙집이 감소하고 주
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
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원원하는
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

중진공, 中企 온라인 수출에 총력

참여기업 모집… 24일까지 접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달 24일
까지 ‘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’
참여기업을 모집한다.

2일 중진공에 따르면 온라인수출패
키지 지원사업은 기존의 온라인수출 지
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
사업으로,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별 후
집중 지원을 통해 온라인수출 전문기업
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했다.

플랫폼 입점, 마케팅, 물류, 배송 등
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
로 지원한다.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▲
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▲온라인전시
회 ▲미디어콘텐츠마케팅 ▲온라인수

출 공동물류 등이 있다.

‘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’는 글로벌
쇼핑몰 전문기업을 통해 아마존, 타오
바오, 쇼피 등 플랫폼 입점과 제품 판매
까지 지원한다. ‘온라인전시회’는 온라
인사이트 내 전시관을 구축하고 온·오프
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해외 바이어와
의 수출 계약을 맺는다.

지난해 새로 생긴 ‘미디어콘텐츠마
케팅’은 글로벌 플랫폼의 미디어커머스
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연
계 프로모션을 지원한다. ‘온라인수출
공동물류’ 사업은 중소기업 물류비 절
감을 위해 국내·외 물류거점과 풀필먼
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.

/김승호 기자

개항 후 22년 만에 누적 환승객 1억명

인천국제공항사는 2일 누적 환승
객 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
2001년 3월 29일 개항 후 22년 만이다.
인천공항 환승객은 개항 당시인 2001
년 163만 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
가해 2019년 723만 명을 기록했다. 코로
나 직격탄을 맞은 2021년에는 54만 명
수준까지 급감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.
인천국제공항사 측은 “2022년에는 전
년 대비 400% 성장한 271만 명을 기록하
며 중국·일본 등 경쟁공항 대비 빠른 회
복세를 보이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에 공사는 2023년 다양한 환승마케
팅 활동에 박차를 가해 환승객 수요회
복을 견인함으로써 코로나 회복기 동북
아 환승수요 경쟁우위를 선점해 나간다
는 계획이다.

/허정윤 기자